제 7회 여성평화통일포럼 (대중포럼)

2002 대선 후보들의 평화·통일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 일시 : 2002년 1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 ~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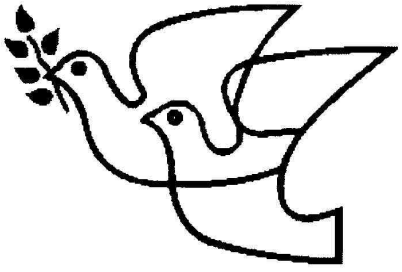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11층)

• 주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후원 : 여 성 부

제7회 여성평화통일포럼(대중포럼)

2002대선 후보들의 평화·통일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 일시 : 2002년 12월 4일 수요일 오후2시-5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11층)

• 주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후원 : 여성부

행사내용

. 사 회 :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1부 발제 및 지정토론 (14:00~15:30)

개회사 : 이김현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주제발제 :

대선후보 주자들의 평화,통일정책 점검 및 평가
김귀옥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부원장, 경남대 북한대학원 객원교수)

지정토론 :

토론 1 : 통일정책 측면에서 바라본 평가
.윤덕희 (명지대학교 북한학 교수)
토론 2 : 여성적 시각에서 바라본 평가
남인순 (여성연합 사무총장)
토론 3 : 대선후보 대미/북핵/안보 정책 비교/평가
정욱식 (평화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2부 전체토론 (15:40~17:00)

차 례

발제문

Ⅰ 대선후보 주자들의 평화, 통일정책 점검 및 평가 ------ 6
김귀옥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부원장, 경남대 북한대학원 객원교수)

토론문

Ⅰ 통일정책 측면에서 바라본 평가 ---------- 27
윤덕희 (명지대학교 북한학 교수)

Ⅱ 젠더(gender)적 측면에서 바라본 평가 ---------- 29
남인순 (한국여성단체 연합 사무총장)

Ⅲ 대선후보 대미/북핵/안보 정책 비교/평가 ---------- 32
정욱식 (평화시민네트워크 대표)

참고자료

16대 대선후보 평화(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 ---------- 45

2002대선 후보들의 평화·통일 정책 점검 및 평가

김귀옥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부원장, 경남대 북한대학원 객원교수)

"우리가 공산정권과 협상할 때는 그 정권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평화를 원할 때는 김정일과 상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김대중대통령의 외신기자 인터뷰 중에서, 2002. 11. 29).

"버스 운전자라도 MDL(남북관리구역내의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면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내달중으로 계획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작업을 포함해 남북 인원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모든 행위는 유엔사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한다"(유엔사 부참모장 솔리건 미군소장의 기자단 간담회 중에서, 2002. 11. 28).

1. 2003년, 21세기를 부르는 사람들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명실상부하게 21세기 대통령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냉전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탈냉전 질서를 정착시키고 평화와 화해, 복지, 평등의 시대로 간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올 초에 있었던 '악의 축' 사건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는 중요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와 초국적기업, 전쟁,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 주한미군, SOFA, 민중과 여성의 생존권이라는 각각의 다른 실 가닥이 같은 실타래에서 풀려 나오고 있음을 성찰할 수 있었다. 미군에 의한 여중생의 사망 사건으로 이러한 문제가 한데 얽혀있음이 대중적인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어느 방송사의 여성 앵커가 뉴스 진행상에서 '부끄럽다'는 말 한마디의 실수(?)로 사퇴하는 일이 일어났다. 진위와 상관없이 사회적 담론으로서 '반미'는 더 이상 '용공'이 아니라는 지적[1]과 함께 반미가

사회적 진보의 척도가 되고 있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최근의 현상에서 우리의 인식을 보다 성숙시키고 그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기 위해서는 반성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운동은 목표와 방식을 정확히 하되, 많은 사람을 포용하면서 대중 속에서 뿌리를 내리며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감대를 넓히기도 전에 사람부터 다치게 한다면 운동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기 어렵고 상처만을 줄 수 있다. 실로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과거의 방식으로 깃발을 들고 그 깃발아래 일직선의 줄을 서지 않으면 '적(敵)'이라는 인식으로는 냉전시대 닫힌 사회를 열어나갈 수 없다.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여는 방식도 평화와 통일의 방식이 될 수는 없는가?

한편 2002년 대통령 주자들의 공약에는 이색적인 공약이 나온다. '제왕적 정치인'이나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를 청산하겠다는 내용이 그것인데, 새삼 지난 시대가 제왕의 시대였음을 깨닫게 해준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재현된 제왕은 안으로는 폭군(?)일지라도 밖으로는 천하를 주름잡던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 비춰볼 때, 우리의 지난 시대 제왕은 사뭇 큰 거리가 있기에 제왕(帝王)이 아니라 제왕(諸王)이 아니었던가를 싶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제왕은 안으로는 독재자였지만, 밖으로는 제왕(帝王)의 권위를 빌리는 봉건 영주적 면모를 가진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즉 현실적으로 지난 시대 한국의 대통령은 전통시대 중국에 의해 책봉되는 제왕(諸王)과도 유사한 듯이 보이는 의례로서, 대통령만이 되면 의례껏 미국의 검증 절차를 거쳐 미국이 공인하는 대통령으로의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왕(諸王)적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진다. '한·미 공조'의 유려한 문체로 다져진 모순적인 제왕의 질서를 과연 2003년 대통령은 청산할 수 있을 것인가? 헌법적으로 군통수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유엔사 소장, 솔리건 씨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의 하나인 분단을 장벽을 어떤 식으로 해체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제왕들이 국내적으로 누렸던 전횡적이고 독단적인 지위를 버리고 이 땅의 주인들과 그러한 권력을 모두 나누면서, 평등을 누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또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한반도 평

---

* 경남대 북한대학원 객원교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부원장, freeox@naver.com

1) 『연합뉴스』. 2002. 11. 29.

화·통일의 문제를 볼 때, 우리 대통령 주자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려 하는가, 여성들의 바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 지난 김대중 정부 5년간 실패한 것도 많았지만, 대북포용정책과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전후로 하여 통일운동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2001년 미국에 대한 9·11테러사건과 미국의 아프간 폭격을 전후로 하여 평화운동이 외양면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운동의 성장은 자체 많은 문제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5년간 평화·통일운동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빠져서는 안 되는 지위를 갖게 되었고 양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정현백, 2002). 그러나 평화와 통일시대를 준비하기에는 통일정책이나 통일운동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는 아직 여성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며, 특히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 참여는 현저히 떨어진다(김민정, 2002). 결국 여성주의적 평화와 통일은 여성이 적극적 참여하고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노력을 다바칠 때 가능하겠지만,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정부가 그러한 여성계의 인식과 주장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를 둘러싸고 열린 사회의 담론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열린 사회를 열어 가는 주역으로 여성이 함께 설 수 있을까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제 여성들이 희망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대통령 후보 공약 점검

1) 평화·통일분야에 대한 여성들의 정책과제 요구안

2002년 10월 25일, 여성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성계 핵심 요구과제를 집중적으로 요구하여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여성과제가 채택되도록 할 목적으로 16개 광역 시·도, 100여개 여성단체들이 '2002년 대선여성연대'(이하 대선연대)를 출범시켰다. 대선연대가 요구한 평화·통일분야

제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여성이 바라는 10대 주요 과제**' 중 다섯째 과제가 '평화·통일 정책에서의 여성 50% 참여확대 및 반전·평화정책 수립'이 포함되어 있고, '**여성이 바라는 60개 세부과제**'에서 관련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2)]

우선 각 분야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하여 '여성정책담당관'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여성정책담당관제는 1998년부터 6개 부처(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부, 노동부)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기관들에도 여성 관련 정책이 상당 부분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결핍되어 있으므로 새 정부에서는 신설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VII. 각 분야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43) 여성정책담당관 확대

▶ 정책요구

우선적으로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통일부, 환경부 내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설치하고 여성부가 주관하는 여성정책담당관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다음 보다 구체적으로 평화·통일분야에 해당하는 세부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 우선 여성은 통일관련 주요 정책과 통일을 위한 참여과정에 배제되어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여성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능동적,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X. 지속가능한 대안사회를 위한 여성참여 확대

(58) 평화·통일분야의 주요 심의 기구에 여성참여 확대 및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지원 강화

▶ 정책요구

---

2) http://www.women-vote.org/ 참조바람.

-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통일정책실현을 위해 평화·통일 관련분야(국방, 외교, 통일)의 주요 심의 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50% 이상 확대

- 다양한 남북여성교류를 통해 남북 서로의 여성 상황과 여성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통일 이후 여성정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행정·예산 지원 적극화

통일은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통일 관련 정부 기구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남북 여성이 통일 이후 여성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 과정에서 시급한 문제의 하나인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 남북상호군축의 실현은 절실하다.

(59) 반전·평화정책 수립과 남북상호군축 실시

▶ 정책요구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미국의 대 이라크전에 대한 한국 지원요청을 거부하고 남북상호 군축을 실시하고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상호군축의 실현은 직접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만 국방비의 평화적 이용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 즉 여성정책, 아동 및 청소년, 노인정책, 사회적 소외계층정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분단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절실한 요구로 된다.

나아가 『2002 대통령 선거 주요 여성공약 요구집』에는 "학교와 언론에서 평화교육과 평화문화를 다루도록 갈등해소·관용훈련 교육, 평화심성개발교육 등 평화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2002년 대통령후보들의 한반도 평화·통일 인식과 공약 검토

여성주의적 관점을 획득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며, 평화와 통일인식을 갖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두 가지 인식을 결합시켜 세상을 바라본다거나 대통령 후보를 점검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지난 11월 28일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친 지금 7명의 대통령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3] 그 가운데 선거에 영향력 있는 기호 1번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와 2번 새천년민주당 노무현후보와 함께, 노동이나 민중계를 대표하는 4번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 3명의 후보의 평화·통일인식과 공약을 비교 검토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세 후보의 이 분야의 인식과 공약을 검토하는 데에는 공약집과 공개 간담회, 연설문, 토론회,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동원하였다. 특히 이번 검토를 위하여 참여연대와 경향신문 공동 대선후보 평화안보분야 정책검증팀,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대통령후보설문조사, 평화,통일단체(6월사랑방 국제민주연대 통일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이상 가나다 순)/대선유권자연대 등이 공동 질문지조사 및 분석한 자료를 동원하였다.

우선 평화·통일 인식을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서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에 대한 어떤 전망과 공약을 제시하는가에 있다. 세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미국문제, 주한미군, SOFA 등에 대한 공약을 살펴보겠다.

---

3) 기호 1 한나라당 이회창, 기호 2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기호 3 하나로국민연합 이한동, 기호 4 민주노동당 권영길, 기호 5 사회당 김영규, 기호 6 호국당 김길수, 기호 7 무소속 장세동(선거법제150조 규정에 따라 중앙선관위 결정)

<표1> 한반도 질서와 한미 관계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미국관	전통적 우방	한반도 분단은 미, 소 외세에서 기원. 동맹국	분단의 원인
한미관계/ 남북관계	한미공조 우선	수평적 한미관계 정립	자주적 남북관계 우선
전시작전권 환수	답변 안함	추진	적극 추진
통일과정 주한미군 주둔	한미동맹에 중요하므로 계속 주둔	필요시 계속 주둔	단계적 철수
미국 주도의 MD참여	답변 회피	답변 회피	반대
미국의 대이라크 참전 요구 문제	답변 회피	답변 회피	반대
SOFA 개정에 대한 입장	형사관할권 조항 환경관련 조항 개선 필요	중요 부분 개정	전면적 개정(수사권제한 조항 폐지, 공무상 범죄관련 재판권 이양 등)
국제형사재판소(ICC) 면책을 위한 미국의 쌍무협정 요구에 대한 입장	ICC 회원국으로 의무 이행, 따라서 미국 요구에 불응	검토후 결정	불응

미국에 대한 인식이나 한미관계에서 있어서 이회창후보와 권영길후보는 극명히 대조되는 입장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노무현후보는 미국을 동맹국으로 인식하지만, 과거 종속적 한미관계를 수평적 한미관계로 바꿔나가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나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 정책, 대이라크 참전 요구 문제에 대해서 권후보는 명백하게 반대하는데 반해 이후보는 전반적으로 답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노후보는 작전회수권과 같이 국익이라는 기준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국제 문제 개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거나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최근 의정부 미군전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해서는 이후보와 노후보는 부분적 개정은 인정하되, 개정 방향에서 노후보는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제시한 반면, 이후보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형사관할권과 환경 관련 조항에 대한 부분적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권후보는 전면적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의 견해에서 큰 편차를 볼 수 있다. 이후보는 한미공조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은 통일이전이나 이후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노후보와 권후보는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에는 미국의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라는 비슷한 이유를 제시하지만, 노후보는 세력균형자로서 미군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자주권의 입장에서 미군의 철군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보의 공약에는 기존의 냉전 질서가 사실상 그대로 남아 있는 반면, 권후보의 것에는 냉전 해체 방향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 반면 노후보는 냉전 해체에 대한 인식에는 합의하면서도 다시 미국문제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입장이 깔려 있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 쟁점의 하나로 되어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협정 문제에 대해 미국은 미군과 미국인이 전쟁범죄 및 대규모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피소될 것을 염려해 해당국과 쌍무협정 체결을 통해 자국인에 대한 면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후보와 권후보는 불응해여 한다는 입장임에 반해 노후보는 검토후 결정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음으로 평화·통일 문제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대북 정책과 대북 지원에 대한 각 후보의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2> 대북 정책과 지원

	이 회 창	노 무 현	권 영 길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및 계승	실패한 정책, 전면 면수정. 평화3원칙, 5대 과제	남북관계의 역사적 대전환점 이룩. 남한 중심적 어감. 적극적 평화번영 정책으로 전환 필요	화해협력적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 흡수 통일로 인식 가능성. 4단계통일방안으로 전환 필요
6.15 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이행 여부	제2항 재검토	존중	존중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핵개발과 개혁 개방이 양립할 수 없다	대북포용정책의 결과. 개혁 개방 노선을 선택	북한의 개혁 개방이 시장일변도의 경제가 아니라 남한 경제의 장점과 북한 경제의 잠재력을 결합시키는 방향
신의주특구에 대한 인식	조건부 긍정. 시장 장적 변화가 아닐 경우 부정	시장적 방향으로의 변화	급작스런 변화나 위험한 경제실험은 아님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	'악의축'규정에 대한 답변 회피. 기타 답변 안함	강온 양면성 존재. 기본 기조는 대화	대북강경정책, 한반도 화해분위기 무산, 세계평화 위협 요소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및 고립화 정책에 대한입장	답변 안함	소극적 반대	반대
인도주의적 지원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여부	전략적 상호주의. 대규모 정부 지원 상호주의 적용	반대	반대
남한 주도의 대북 전력지원	반대/북한 핵포기 및 위협 감소후 추진	남북간 종합협력 계획 선행해야	적극 추진
대북 중유 제공 중단	KEDO 결정에 따름	답변 회피	반대
제네바 합의에 대한 미국의 불이행 문제	답변 안함	불이행한 측면이 인정됨	
북핵문제	강경대응	북, 미 쌍방의 제네바합의 불이행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이나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이후보는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하며 그 이유로서 북한에 끌려 다닌다거나, 북한퍼주기론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통일방안으로 '평화3원칙, 5대과제'를 제시하였다.[4] 평화3원칙에서 기본적으로 이후보의 한미공조 우선론과 남북당사자 주도론 간에는 모순과 긴장이 존재한다.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문제제기의 핵심은 '제2항'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내용이다. 2000년 6·15이후 학계 및 전문가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낮은 단계 연방제와 국가연합제 안에는 공통점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노후보는 햇볕정책의 기조를 발전시키는 방안으로서 '평화-번영정책의 5원칙·6대 과제'를 제시하였다.[5] 평화번영정책의 기본 목표로서 분단체제의 완전해소, 평화협정 체결을 제시하였고 비교적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 놓고 있다.

권후보는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점이 있지만, 햇볕정책은 흡수통일론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음을 비판하면서 민주노동당의 '4단계통일방안'[6]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관계, 대북지원 등에서 입장을 취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는, 북한의 변화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위 표를 통해 세 후보의 북한 보는 시각 차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권후보의 경우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북한의 최근 정책적 변화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노후보는 최근 북한의 조치에 시장경제, 개혁개방적 성격이 수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편 이후보는 시장경제를 수용한 것으로 보되,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북 지원, 남북협력에 대한 입장이나 공약과 관계가 있다. 이후보의 경우에는 대북 지원이나 남북협력의 문제는 북한의 변화, 제네바합의서 이행, 전력 등의 지원과 연계시켜 후자가 검증될 때 지원이나 협력이 가능

---

4)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 엮음, 2002, 「나라다운 나라, 내일을 약속합니다」(대선공약집) 참조. http://www.leehc.com

5) 노무현 대통령후보 공약, http://www.knowhow.or.kr 참조바람.

6)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화해·협력>-<민족연합-민족통일기구 수립>-<연방국가>-<완전한 사회통합>이라는 4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다는 입장이다. 즉 검증 없이 협력 없다는 '전략적 상호주의'의 입장이다. 노 후보의 경우 햇볕정책의 기조인 정치·경제분리정책을 취하여 검증의 문제와 협력의 문제를 분리시키고 있다. 검증의 문제의 핵심인 북핵문제나 제네바합의서 이행 문제에서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불이행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에 비해 권후보는 북핵문제는 결국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서 나왔으므로, 북핵문제와 교류협력문제를 연계하는 것을 반대하고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여 중유 공급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세 후보 모두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지만, 구체적 실천 공약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사태의 원인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로 보인다. 이후보는 북핵문제가 현실화되면 모든 대북지원, 특히 대북현금지원[7] 즉각 중단과 같은 강경 대북압박정책을 취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반면 권후보는 제네바협정 이행의 문제는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이 원인을 되므로 중유를 계속 공급하고 전력을 지원했을 때 협정 준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노 후보는 남북 교류 협력을 지속하면서 북미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문제와 연속선 상에서 이후보는 비록 평화3원칙과는 모순되기는 하지만, 한미(일)공조 우선시 속에서 남북 관계를 바라보고 그러한 입장과 공약을 취하고 있다. 그의 입장은 과거 냉온탕을 번갈아가며 다녔던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을 방불케 할 가능성이 있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권후보의 입장은 논리적으로 선명하고 민족중심적 관점을 명백하게 보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위정자로서 국제역학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거나 무관심하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노후보의 경우 수평적 한미관계에 이어서 대북정책에서 정치·경제분리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나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긴장이 클 때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는 12월 2일자 *The Korea Herald*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북강경정책을 통해 '미국은 얻을 게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얻을 게 없다'고 보고 더 이상의 대북강경정책은 한국 및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7) 김대중 정부의 연평균 대북지원액은 9천667만달러(1천219억원)로서 1972년~89년 기간 서독의 대동독 연평균 지원액 32억달러의 3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 기간에 국민 1인당 연평균 대북 지원액은 2달러(2천560원)로 나왔다. 「연합뉴스」 2002. 11. 11.

이와 함께 북·미수교나 북·일수교에 대한 전망과 한국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후보가 한·미·일 공조의 강화 속에서 북핵에 대한 우선적인 해결을 할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후보는 북일 회담 과정에서 제기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인을 지켜보며 집권 후 북한과의 대화과정에서 테러 및 납치 문제에 대한 사과 및 인도주의 문제를 선행 해결하면서 대화의 수위를 조절하겠음을 언급하기도 했다.[8]

<표3> **북-미 수교, 북-일 수교에 대한 전망과 한국정부의 자세**

	이 회 창	노 무 현	권 영 길
북-미 수교의 전망과 우리 정부의 자세	한미공조의 강화, 북핵과 같은 의혹의 선행해결 없이 대화 없다는 입장	핵문제 해결시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 긴장 조성 자제. 사실 확인과 대화촉진에 적극적 역할	북미수교는 한반도통일의 견인차 역할. 선대화, 후일괄타결로의 전환 필요.
북-일 수교 전망과 우리 정부의 자세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 전제하에서 수교 진행.	북일수교 방식은 당시자들의 논의 사항. 동북아 평화구축과 공동번영 차원에서 협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수교의 역할 긍정. 적극 지원 필요

다음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군축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선결조건이 된다. 우선 1999년과 2002년 서해교전으로 초미의 관심이 된 북방한계선(NLL)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기로 한다.

8) 『연합뉴스』 2002. 9. 25.

<표4> 정전협정 및 군사문제

	이 회 창	노 무 현	권 영 길
NLL의 공동어로화 추진	반대	찬성	찬성
NLL 대체 해상분계선 설정	반대	반대	찬성
교전규칙에 선제공격 허용	찬성	찬성	반대
국방백서 '주적' 표현	삭제 반대	삭제 반대	삭제 찬성
평화협정체결	한국 없는 북미 중심의 평화협정 반대	국제적인 보장 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	북미간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절실

이후보의 NLL에 대한 입장은 그의 '평화3원칙5과제'에서 도출된다. 즉 군사적 긴장완화, 적대적 대결구도 해소에는 동의하되 '기존경계와 관할구역(NLL) 존중'을 기본 축으로 삼고 있다. 이는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휴전선으로 간주하여 대체 해상분계선을 설정한다거나 NLL 구역의 공동어로화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이후보는 정책평가팀과의 질문지 조사에서도 북한이 NLL를 이행할 때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동어로수역 문제 등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후보는 북방한계선(NLL)을 대체할 새로운 해상분계선 설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반면, 남북한의 해상 무력충돌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남북 한계선 지역을 남북 공동어로로 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권후보는 NLL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인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의 대화를 통한 대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평화협정에 관한 한 세 후보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앞에서 세 후보가 일관성 있게 보이는 태도로 비춰볼 때 다소 상반된 입장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보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의 주도권이 배제된 북미간의 평화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후보는 북한과 미국간의 평화협정을 우선시 하기보다는 남한과 북한이 먼저 체결을 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간의 국제적 보장을 확보하는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군축 문제에 대한 공약을 검토해보자.

<표5> 병역제도 개선 방향

	이 회 창	노 무 현	권 영 길
병력규모축소	언급 없음	유보	20만명 감축
군복무 기간단축	2개월이상 단축	기본방향에 찬성 (구체안 유보)	18개월로 단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	반대	유보/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복무제도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	찬성
모병제 전환	반대(시기상조)	반대	찬성
예비군 및 민방위제도 개혁	현행틀에서 보완	예비군, 민방위 모두 기간 단축	예비군제 폐지 및 민방위제 유지

군사적 긴장 완화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운 문제의 하나가 병력규모의 축소이다. 병력규모의 축소는 단순히 인적 군사력만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병기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특히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현대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적 군사력이 최우선적인 척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후자 개념보다는 인적 군사력 개념 중심으로 군축을 보고 있다.

세 후보 중에서 군축 방안으로 병력 규모의 축소를 언급한 후보는 권후보밖에 없다. 다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력의 축소가 현실성 있는가는 지적이 있다. 이후보의 평화3원칙, 5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선 긴장해소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제시하여 북한의 비적대성을 입증할 때까지는 군비축소를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다. 노후보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의 군사적 대북강경압박정책은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킨다는 우회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복무기간의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보나 권후보의 단축안에 대해 노후보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또한 2001년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 복무문제, 모병제안에 대해서는 권후보만 찬성하였고,

이후보는 시기상조론을 들어 반대하였고, 노후보는 복무제도의 개편과 함께 논의될 문제로 보았다.

그외 평화·통일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짚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표6> **평화·통일 논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

	이 회 창	노 무 현	권 영 길
여야 및 시민사회 참여의 대북통일정책심의, 결정기구 설치	검토 용의	협의는 가능, 결정권 부여는 반대	찬성
통일관련 정부 기구에 여성 참여 보장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일정비율 여성 참여를 의무화	명시 없음. 여성 관리직 임용 목표제를 도입해 5급이상 공무원관리직 여성 비율을 20%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30%이상 승진 목표제 도입. 평화 군축 국방 안보 분야의 여성참여 확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유지	폐지후 대체입법	폐지

우선 정부,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북통일정책심의 및 결정기구의 설치에 대해 이후보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 반면 권후보는 찬성하고, 노후보는 협의 성격만 부여하고 결정권 부여에는 현실성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일관련 정부기구에 여성참여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권후보만이 평화 군축 국방 안보 분야에 여성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명시하고 이후보와 노후보는 관리직 공무원에서 여성을 참여를 언급하되 평화통일분야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김대중 정부 내내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도 존폐 여부의 대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이후보가 유지로 입장을 취하여 보수적 견해를 대변하고 있는데 반해 권후보는 폐지, 노후보는 폐지후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3. 대선후보의 평화·통일 입장과 공약 평가

대선 후보의 평화·통일공약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과거 냉전 시대의 질서를 청산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있어서 방향성을 얼마나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얼마나 실현가능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있다. 특히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세계는 현재의 WTO체제나 대안으로서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정 등을 통하여 국경 없는 세계질서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프타를 중심으로 한 북미권, 유럽연합의 유럽권이 세계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1980년대이래 아시아 4마리 용으로 불리며 모범적인 NICs 중 하나로 평가받았던 한국 경제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맥없이 쓰러지면서 거품경제를 실감하게 되었다. IMF신탁 하에서 신자유주의적, 미국식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전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노동자, 농민, 여성, 사회적 소수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분야에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나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의 문턱을 낮추는 것만이 구제책으로 고려되고 있다.

한편 남북교류와 협력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 회생의 관문은 남한 기업과의 협력사업이 가장 유력한 대안의 하나이지만, 남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중저가시장마저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가져올 여러 측면의 잠재성이 경협 확대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김연철, 2002; 김귀옥, 2002). 경협이 확대되기 위해서나 한국의 도약을 위해서나 한반도의 평화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안정은 중요한 조건이 된다. 또한 그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한반도 주민과 아시아 민중들의 분배의 요구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 전쟁 없는 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지 못하는 한, 가중되는 국방비는 여성이나 청소년, 사회적 소수자들의 복지 요구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 구축과 발전은 한반도에서 냉전 해체와 필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정세가 저절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져다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변국들과의 협조와 함께 자국 정권의 주권의 확보가 없이는

평화와 통일은 공염불이기 십상이다. 한때 남한에는 북한조기붕괴설이 사회적 담론으로 생산되어 흡수통일론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적잖은 국내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설령 북한이 조기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남한 정부가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오히려 초국적기업이나 외세에 의한 흡수가 더빠른 길이라는 평가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북이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공조와 함께 남북공조가 절박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냉전 해체는 절박한 과제이면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세 후보의 이 분야 공약을 평가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세 후보 모두 21세기 동북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회창후보의 평화정착안은 크게 보아 '안보우선기조'에 서있다. 북미관계 해결, 군축문제, 대북지원과 남북 대화 및 교류 등 모든 면에서 북한에 의한 긴장완화, 검증, 북한의 무장해제 입증 절차가 없이는 큰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사실상 냉전 질서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전략적 상호주의가 전형적인 냉전인식이기 때문이다. 20세기 말 세계적 탈냉전을 가져온 것은 상호주의가 아니라 일방주의에 의한 신뢰구축이었다. 즉 구소련의 일방적 군비축소, 서독의 일방주의적 동독정책이 탈냉전을 가져오는 데 기폭제로서 역할 하였다. 또한 '한미공조체제로의 복원'은 김영삼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마저 낳을 수 있다.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은 잘 알려진 대로 '동족'의 논리와 '주적'의 논리라는 양극을 치달았다. 그럼에도 김영삼대통령의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는 말은 동족의식의 회복을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시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후보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끌려가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한미공조체제로의 복원을 주장함으로써 다시금 1993년 핵위기 상황에서 1994년 6월위기 상황을 재현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바가 있다.

반면 권영길후보의 평화통일정책은 이후보의 정책과는 명백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후보의 공약과 주장은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고 철저한 민족공조

및 자주 우선주의라는 정책적 기조 위에 놓여 있다. 또한 군비축소나 군복무기간 단축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탈냉전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햇볕정책에 대한 공과를 분명히 하여 화해협력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뛰어넘어 4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보인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권후보의 급진적인 주장이 진보적 시민사회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소수여서 대중성을 얻지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비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를 들어 평화협정이나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의 조인 없이 감축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또한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가능하게 할 방안은 무엇인가? 일국 단위에서 국가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과 주변국과의 역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할 수밖에 없는 일은 구분되어 보인다. 결국 넓은 의미의 국가는 시민사회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시민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국가 역량을 좁게도, 넓게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국가는 민중지향적이되 대중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획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통일분야에서 노무현후보의 공약이나 기조는 이후보만큼 보수적이지도 않지만, 권후보만큼 진보적이거나 선명하지도 않다. 노후보에게서 분명한 것은 21세기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평화-번영정책의 5원칙·6대 과제'와 그를 위한 동반자로서의 북한을 인정한 점, 미국 문제에 있어서 수평적 한미관계의 조정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통일 후 주둔입장에는 한반도인식을 넘어서 동북아에서 균형의 필요성으로 인정했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현실론에 가까운 판단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성격을 역관계에 따라 새롭게 규정될 수 있는 근거로서 탈냉전 시대 유럽에서의 미군의 주둔에서 찾고 있다. 그는 미국에게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되지만 미국의 현실적인 힘을 무시할 수도 없으므로 견제와 협력이라는 두 측면에서 미국문제를 직면하면서 한반도의 자주적 공간을 넓혀나가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약에서 애매모호한 미국과의 관계 문제, 북핵문제와 같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애매한 태도도 문제로서 남아 있다.

세 후보에게 적용되는 문제의 하나는 평화와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여성주의 시각(gender perspective)의 여부이다. 적어도 공약상으로 권후보는 이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평화와 통일문제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진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인식은 세 후보에게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여성계에서 질문을 해서 답변으로 여성관련 공약을 제시하는 것과 스스로 상관관계를 인식하고 문제제기를 하며 여성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평화와 통일의 시대는 현재 남북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이다. 분단과 냉전의 시대가 만든 많은 문제 중 하나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양산에 따른 성불평등 문제를 새로운 시대를 형성하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 분단이 양산하고 확대시킨 군사주의 문화, 권위주의적 사회관계와 문화, 노사관계, 성매매 문화산업 등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은 희생당하고 성평등을 억압당해왔다.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만들고 준비하는 데에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만, 국정의 최고지도자에게 그런 인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것은 다음 정권에서의 여성의 과제를 더욱 분명히 제기해주고 있다.

우리 현대사에서 여성 스스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일은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보이는 현재 남북관계의 모순을 그대로 안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갈 수는 없다. 물론 여성주의적 시각 내에도 커다란 편차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즉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보는데 있어서 그 편차에 따라 문제의 원천과 대안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하지만 최소 강령으로 합의해낼 수 있는 점은 분단이 고착시킨 군사주의 문화와 가부장제 질서와 같은 낡은 과제를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 필요조건이라는 점이다. 또한 평화·통일의 시대는 여성해방의 과제가 완성된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역동성이 필요한 과정이며, 여성이 주체가 된 부단한 운동이 여전히 필요함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귀옥. 2002. "북한의 여성노동력 현황과 활용방안: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통일부 용역보고서.

김민정. 2002. "김대중 정부 평화, 통일정책 평가와 발전방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주최. 『김대중정부 평화, 통일정책 평가 및 여성평화 통일운동』. 제6회 여성평화통일포럼 발표문(11.6).

김연철. 2002. "북한 핵 문제와 대북정책 추진 방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2년 11월 월례발표회 발표문.

정현백. 2002. "여성평화통일운동, 현재와 미래--김대중 정부 시기(1998-2002)를 중심으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주최. 『김대중정부 평화, 통일정책 평가 및 여성평화 통일운동』. 제6회 여성평화통일포럼 발표문(11.6).

<토론문 >

통일정책 측면에서 바라본 평가

윤덕희
(명지대학교 북한학 교수)

○ 이회창 후보의 대미관: 남북 관계를 푸는 열쇠는 '긴밀한 한·미 공조'여야 한다며, "(한·미 간에) 행여 뭔가 의견이 다른 것처럼 보이면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한다" 고 말했다. 또 올해 초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가 전쟁에서 현재까지 경제와 사회를 일으켜 세운 토대가 됐고, 우리가 이 정도의 경제번영을 이루는 울타리로 의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 정권이 잘못된 안보관과 비현실적 대북관 때문에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이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 (공약)는 입장이며, 최근 몇 년간 고조된 '반미 감정' 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최근 SOFA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친미'의 이미지를 벗으려 노력하고 있다.

○ 이후보의 대북정책: 이 후보는 줄곧 "대북 포용정책에도 북한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고 말해 왔고, 특히 북한 핵 개발 뒤에는 "현 정부가 5년 동안 북한에 퍼줬지만 결과는 핵개발로 돌아왔다" 고 말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하고 정상회담시 야당 의원의 참여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6.15 공동선언의 '제2항' 남북한간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를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는 통일방안의 합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간과한 것으로, 통일방안의 합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분간 공산화 통일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후보는 김정일의 답방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따라서 최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발언은 선거를 의식한 전략적인 입장 변화로 보여진다.

○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대결주의적 대북 적대기조, 북한 핵문제는 협상과 홍

정이 아니다라는 입장, 미국의 압박정책 지지, 전략적 상호주의 등으로 어떻게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북한은 여태껏 한번도 압박정책이나 강경책에 굴복한 적이 없다. 또한 이러한 정책 기조하에 대북, 통일정책이 추구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서의 냉전적 질서는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 이 후보의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인사들을 보면 그동안 상당히 냉전적인 논리를 주장해오던 구 관료 출신 및 학자들이다.

○ 노무현 후보의 대북정책: 북한의 변화는 남측의 노력을 통해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실마리는 신뢰다, 인내심이다" (1월 23일 YTN토론), "남북관계는 달래서 풀 수 있으면 풀고, 돈을 줘서 풀 수 있으면 풀어야 한다" (2000.11)

○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 후보와 노 후보간 가장 뚜렷한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반면에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두 후보는 거의 차이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는 '친미', 노 후보는 '반미'라는 이미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정책대결을 내세우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 관련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떳떳한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 대북관계에 있어서 이 후보와 노 후보, 권 후보간의 대립되는 입장차이는 결국 통일관의 차이이다. 즉, 어떠한 통일을 원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후보는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붕괴해서 남한 체제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일종의 '통일지상주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후보의 대선 공약집에서 '통일국가는 자유, 인권, 복지 이념을 기초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가 구현되는 국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흡수통일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노 후보와 권 후보는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지금의 대내외적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합의하에 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토론문 >

- 젠더(gender)적 측면에서 바라본 평가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1. 대선 후보의 평화, 통일 정책 중 여성관련 조항 및 평가

대선 후보의 평화, 통일정책 중 여성관련 조항 평가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요구하는 <2002 대선 여성공약>에 비추어 평가하였으며, 평화, 통일공약에 성인적 측면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공약내용>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평화·통일을 비롯한 국가의 주요정책결정과정에 일정비율 여성참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평가>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사회'라는 여성공약이 총 12개 분야로 제시되어 있다. 그 중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 확대 분야에 한 항목으로 평화·통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여성공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제시한 것은 평화, 통일과정에 여성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수년간 평화, 통일을 위한 활동에 여성의 참여가 증진되어 온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 소극적인 공약이다. 통일부, 여성부에 전담부서 설치, 남북여성교류활동에 대한 적극 지원, 여성평화교육 지원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

○ 노무현 민주당 후보

<공약내용>

62.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다양한 통일운동사업을 지원하고,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NGO활동 및 국제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 여성과 비정부기구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여성을 통일주체로 인식, 여성들 특유의 강점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감.
- 여성단체 간부 대상의 통일교육을 실시
- 통일 후 남북 여성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실험적 프로그램 마련

63. 북한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해 남한 여성의 IT전문가를 파견해 교육기관을 설립하겠습니다.

<평가>

- 여성정책 10대 비젼에 '평화·통일·환경·국제협력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를 명시하고 70개 실천과제 중에 2개를 제시하여 다른 후보에 비해 평화, 통일 정책 수립과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의 IT교육기관 설립은 남북여성교류를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실현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 권영길 민노당 후보

<공약내용>

3. 여성의 정책결정권 강화

- 평화·군축·국방·안보 분야의 여성참여를 확대하며, 여성부문의 남북교류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평가>

통일, 평화 정책에서 상대 후보에 비해 진보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데 비해 평화, 통일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 미흡해서 실망스럽다.

2. 총평

평화, 통일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비해 세 후보의 관련 공약은 전반적으로 빈약하다. 그동안 여성평화통일운동이 실천해 온 성과에 비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토론문>

대선후보 대미/북핵/안보 정책 비교/평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1. 대미관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여중생 사건에 대해 미군측이 '무죄 평결'을 내리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미국에 대해 목소리를 낮춰왔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나름대로 '한미관계의 개선'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있다. 이를 두고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표를 의식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여론에 떠밀려 급조한 공약인지,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담겨 있는지, 집권 후에 이를 실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반미 지도자'로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국민 여론의 의식하고 있는 모습을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삼구동성(三口同聲)으로 외치는 'SOFA 개정'

여중생 사건 무죄 평결이후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에 대해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모두 SOFA 개정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후보는 무죄 평결이 나온 직후부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SOFA는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형사관할권 조항과 환경관련 조항은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은 무죄 평결에 대해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 법무부와 청와대를 겨냥해 "누가의 정부냐"며 비난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이회창 후보가 어제(11월 26일) TV 토론에서 이 문제를 적시,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즉

각적인 반응이 나와 다행스럽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반미 문제'로 곤혹을 치른 바 있는 노무현 후보는 SOFA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후보는 "한미협력의 큰 틀 속에서 미국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일본이나 NATO가 미국과 맺고 있는 협정의 수준으로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에 대해 'No'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권영길 후보는 SOFA 개정에 대해서도 가장 적극적이다. 그는 '부분 개정'으로는 안되고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한국의 수사권 제한 조항 폐지, 공무상 범죄에 대해서도 한국의 형사재판권 관할, 환경파괴에 대한 복구 의무를 명시한 환경조항의 개정 등을 내걸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이처럼 삼구동성으로 SOFA 개정을 외치고 있지만, 집권 후에 이를 실천에 옮길지는 두고볼 문제이다. SOFA 개정 불가, 특히 미군을 한국을 포함한 타국 법정에 세우는 것에 거의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SOFA 개정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SOFA 개정 문제는 차기 정부의 첫 번째 대미외교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자국의 국민이나 군인이 기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양자협정에 대해 이후보와 노무보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후보는 "ICC 회원국으로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노후보는 "검토후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권후보 역시 이후보와 마찬가지로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모호성으로 일관하는 MD 참여 문제

차기 정부가 직면할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요구 가운데 하나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하라는 것이 될 것이 확실하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6월 13일 MD 구축의 제한을 둔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이 공식적으로 파기된 이후, 유럽과 동북아의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MD 참여 압력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MD 열차가 곧 떠난다. 참여 여부를 빨리 결정하라"며 일본과 유럽 국가들에게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도 하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대선이 임박한 관계로, MD 참여 문제를 껄끄러운 김대중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MD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출범 직후부터 미국이 2003년에 추진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최신 개량형인 PAC-3와 탄도미사일 요격체제를 장착한 이지스함의 남한 배치 문제와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MD 참여 문제가 한미간의 민감한 사안인 만큼,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한 권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후보는 "아직 미국의 MD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문제를 결정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노후보 역시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MD의 내용과 의미, 한반도에서의 적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미 미국의 MD 계획은 '계획 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접어든지 오래고, 미국의 MD 참여 요구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1999년 3월, 2001년 1월과 5월 등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미 관련 사안의 모호성은 대이라크 전쟁 직간접적인 참전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권후보 진영에서는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을 패권주의적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불참 의사를 분명히 한 반면에, 이후보와 노후보는 "지금 단계에서 밝힐 사안이 아니다"며 검증의 예봉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한미관계 청사진에 대한 삼인삼색(三人三色)

이후보와 노후보 모두 한미동맹이 안보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어왔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한미동맹관계의 유지·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두 후보 모두 주한미군이 통일이후에도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대신 한미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의식한 탓인지, 불평등한 점과 잘못된 점을 적극적으로 고쳐 동등하고 수평적인 한미관계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

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노후보가 집권시 현재 주한미군에게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노후보는 평화단체들과 대선유권자연대가 보낸 질의서에서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보측에서는 이 질의를 포함해 평화단체들과 대선유권자연대가 공동 명의로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언론사외에 답변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 때문이다.
한미관계 개선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후보는 권영길 후보이다. 그는 "남-북-미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북일간 국교수립 과정과 함께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1단계로 지금 당장 전시작전권의 환수 및 SOFA 개정을 추진하고, 2단계로 남-북-미간의 평화체제가 이뤄지면 육군 병력인 2사단과 오산과 군산의 공군 가운데 한군데는 철수시키며, 사실상의 통일단계로 접어드는 3단계에서는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대미관계에 대해 권후보는 다른 후보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후보와 노후보는 거의 차이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후보는 '친미', 노후보는 '반미'라는 이미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정책대결을 내세우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 관련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떳떳한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선거라는 시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라는 상품을 숨겨둔 채, 유권자에게 표를 사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두 후보 모두 남은 기간동안 SOFA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방향, 대이라크 전쟁 참전 문제, 미국 주도의 MD 참여 문제 등 핵심적인 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정책대결다운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2. 북핵문제

11월 27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12월 19일 대선에 대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한국

의 대선 후보들을 '한미관계'의 관점에서 소개하면서, 북한 핵문제가 최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 역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북핵 문제는 물론 한일, 북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일본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등 주요 대선 후보들 역시 북한 핵문제를 현재는 물론 2003년의 핵심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 후보는 특히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내년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로 대선 과정은 물론이고, 차기 대통령의 첫 번째 시험대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위기'가 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가장 주목할 점은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정권 이양기에 중유 및 경수로 사업 중단이나 제네바 합의 파기와 같은 미국측의 대북 보복조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파국에 직면한 한반도 정세'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도, 한국의 대통령들은 출범 첫해부터 핵문제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북미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북한이 93년 3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조성된 위기 상황을 맞이해야 했다. 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 역시 그 해 8월에 미국이 북한의 금창리 핵의혹 시설 첩보를 터뜨리면서 진땀을 흘려야 했다. YS 때는 대북강경책 및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협상 '딴지걸기'로 오히려 위기를 고조시킨 바 있고, DJ 때는 대북포용 기조를 살리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협상을 적극적으로 견인함으로써 위기를 수습한 바 있다.
차기 정부 역시 탈냉전 이후 한반도에서 5년마다 재현되고 있는 '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오히려 차기 정부는 정부를 구성하기도 전에,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할 정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대중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한반도 정세가 파국을 맞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자칫 차기 정부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노

력하는 동시에, 상황이 파국을 맞지 않도록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즉, 정권 이양기인 12월부터 내년 초에 걸쳐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는 것을 막는 것을 정책의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하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느 후보가 북한 핵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2003년 위기설을 예방하는데 적임자일까? 내년도에 자칫 심각한 전쟁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후보자들의 정책을 면밀히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회창, "북한 핵문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최우선적인 해결을 강조해온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은 즉각 핵개발을 포기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보는 동시에 "한반도에 다시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핵개발 포기는)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시 행정부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후보는 또한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이 시작된 시점과 금강산 관광을 통한 현금지급이 시작된 시점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연히 넘겨버릴 수 없다"며, "북한 핵개발의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북 현금지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후보는 북한 핵개발의 해법으로 핵문제 해결과 대북경협 및 지원의 연계,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한의 경협과 지원을 중단하고,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제네바 합의, 미국도 불이행"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현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핵문제를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특히 평화단체들이 요구한 답변서에서 소극적 안전보장 및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 등 "제네바 합의에 대해 미국측이 약속을 불이행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답변해와, 미국측 책임을 거론하지 않고 있는 이회창 후보와 차별을 보이고 있다.

노후보는 또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와 관련해,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튼튼한 대화 채널을 확보하면서, 북측이 핵개발을 즉각 포기토록 설득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선제공격 위험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유념하여, 제네바 합의에 규정된 '소극적 안전보장'을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후보의 입장은 이회창 후보가 북한의 핵개발 포기 유도를 위해 대북경협 및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노후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화와 협력, 한미일 공조를 통한 설득을 병행하면 북한이 결국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노후보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차별성을 갖고 있는 부분은 경수로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 손실 보상과 관련해, "적절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대북전력지원을 연계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권영길, "일괄타결 필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후보 및 노후보와 입장을 같이 하지만, 그 해결 방안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후보는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 '일괄타결'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대북 핵위협 및 핵우산 정책도 함께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북한 경제제재와 고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대북정책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만의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후보 '위험', 노후보 '현실성 부족'

기실 북핵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인 동시에,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해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 한반도 평화를 한 단계 높일 수도 있고, 반면에 전쟁위기를 포함한 극심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 검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가 한국의 대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동시에 북핵 문제는 후보자들의 대미관, 대북관은 물론 DJ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과도 맞물려 있어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북핵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하나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지, 다른 하나는 한반도 정세가 위기로 치닫는 것을 얼마나 예방·관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유사한 입장을 취해오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이회창 후보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부시 행정부와 거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특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미관계와 북일관계에 이어 남북관계 마저 경색되면, 한반도 정세가 극히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사실상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북핵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는데도, 또한 자칫 다가올 수 있는 한반도의 위기를 예방하는데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을 설득할 창구를 유지하고 정세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회창 후보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세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에 기초해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정답'일 수는 있지만, 이 안으로 현재까지 '대화'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 해법의 구체적인 해결안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권영길 후보는 노후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즉 노후보와 권후보의 해법은 '타당성'은 '현실성'없고, 이후보의 경우에는 '현실성'과 '타당성'이 모두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안보정책

유력한 대선 후보들 '변화'를 추구하기를 가장 주저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안보·국방 분야'이다. 이는 "국가안보가 다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가치' 판단 못지 않게, 안보·국방분야에 대해 개혁적인 입장을 밝힐 경우, "안보를 무시하는 후보"라는 정치적 공세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오랜 관행은 다른 분야의 민주화에 비해 정작 한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인 '안보' 분야의 민주화를 더디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동시에 한국의 안보문제가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와도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개혁하기가 가장 힘든 분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개혁이 시급한 분야이기도 하다. 남북관계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통일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군사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 못지 않게 남한의 안보정책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종속적인 한미관계의 핵심이 군사분야에 있다는 점에서 수직적인 한미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안보정책의 변화는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가안보 못지 않게 개인의 인권의 복지 향상을 골자로 하는 '인간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안보정책으로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안보정책은 다른 사안에 비해 관심이 떨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정책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불인정, 노-유보, 권-인정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서 세 후보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으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병역의 의무제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후현 민주당 후보는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며 이후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대체복무 판정기준을 엄격히 하고, 군복무보다 상당히 무거운 부담을 지우면서, 병역기피로 악용하지 못하게 방지대책을 세우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에 따라서는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적극적으로 대체복무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세 후보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이후보는 현행 26개월(육군기준)을 2개월 단축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노후보는 "병력규모 축소는 군의 전력 수준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군복무기간 단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안보가 확고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후보보다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권후보는 병력 20만명 감축 차원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다.

국방비, 이-증액, 노-현상태유지, 권-대폭 삭감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이후보와 노후보의 대선 공약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는 '늘리겠다는 예산 분야는 있어도, 깎겠다'는 분야는 없다는 점이다. 국방비 역

시 예외는 아니다. 이후보는 현재 GDP 대비 2.8% 수준인 국방예산을 3%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그 근거로 전세계의 GDP 대비 평균 군사비가 3.8%인 점을 들고 있지만, 군사비 산출의 국제적 기준이 국방예산뿐만 아니라 전투경찰비, 해양경찰비, 병무청 예산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근거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비는 2002년 현재 3.2% 수준이기 때문이다.

노후보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사비 증액이나 병력 감축 없이, "첨단 정보과학군의 육성"과 "군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있어 공약 사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지적도 나타나고 있다. 권후보는 방위비를 대폭적으로 삭감해 교육 등 사회복지 재원으로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이후보와 노후보는 '시기 상조'라는, 권후보는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예비군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후보는 '현행틀에서 보완'을, 노후보는 '기간 단축'을, 권후보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도 세 후보의 입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후보는 지역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건설은 '반대'를, 노후보는 '검토후 결정'을, 권후보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탈냉전형' 안보비전 아쉬워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방위비 및 병력의 대폭 감축,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파기 등 급진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안보 비전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후보와 노후보는 안보정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탈냉전형 안보전략을 △남북군사관계를 일방적 안보에서 공동안보로 이행하고, △종속적인 한미군사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발전시키며, △안보 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의 역할을 줄이고 정치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며,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를 균형 발전시키는 것 등에 있다면, 두 후보의 안보정책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것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6월사랑방 ▪국제민주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 ▪대선유권자연대와 함께 "평화와 주권이 보장되는 한반도" 16대 대선후보 평화(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 기자회견때 발표한 자료입니다.

I 16대 대선후보 평화(통일/외교/안보) 정책 총평

1. 총평

대선 후보들은 스스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 기반을 닦는데 자신이 적임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공약과 각종 TV 토론,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안보우선정책, 안보지상주의'라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는 집권시기의 주요과제로 북의 안보위험제거를 최우선적 과제로 꼽을 만큼 안보에 대해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자신의 대북정책의 총론적 방향을 '억제력에 기반한 불안한 평화를 넘어 상호 공존·협력의 공고한 평화정착'(8월 21일 희망포럼 연설)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확고한 억제력, 튼튼한 안보태세, 군사적 우위, 북 '주적' 유지 등를 강조함으로써 구시대적인 남북대결시대의 안보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남북이 일방적인 안보에서 공동안보로 이행해야 한다는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상호간 협력 등 남북간 쌍방의 노력을 통해 신뢰와 화해를 구축하기보다는 북이 '안보위험'이라는 대북관에 근거하여 북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및 개혁개방 요구 등 북의 변화만를 촉구하는 일방주의적 입장을 표방하고 있어 경직된 대북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의 핵문제에 대해 미국조차 핵'개발의혹'수준으로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후보가 이를 핵'무기보유'로 단정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냉전적 사고이다. 또한 대북정책 전반과 한미관계 전반에서도 주권과 인권, 평화와 화해라는 적극적인 입장보다는 철저한 한미공조의 입장에 입각한 정책

을 주되게 제출하고 있어 대미추종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노무현 후보의 평화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이어받겠다'는 평소의 공언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즉, 신뢰에 바탕을 둔 대북접근이라는 원칙적 자세를 견지하고, 정치적 신뢰 조성, 화해협력의 틀 마련, 6.15 공동선언 등과 같은 김대중 정부의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되, 충분한 국민적 합의나 북의 합의 준수를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노무현 후보는 남북간의 화해협력이라는 큰 물줄기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통일의 밑거름이라는 총론을 넘어선 구체적인 평화정착 및 통일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노무현 후보의 평화정책의 가장 큰 한계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한계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여러 가지 성과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탈냉전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안보전략을 수립·실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비군사분야에 있어서는 한반도에서의 냉전해체를 지향하면서도, 군사분야에 있어서는 냉전시대의 정책을 답습함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의 핵심인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에는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대미관계에 있어서의 모호성도 큰 문제점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등 대미관계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미사일방어체제 참여 문제와 대이라크 전쟁 참여 문제, 재판권 이양 문제 등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사실상 인정하는 등 보수적인 이회창 후보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화해교류협력 추진의 성과는 인정하고, 6.15공동선언과 기존의 남북합의 사항들(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은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김대중 정부의

교류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남북미간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 체재하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정책은 일관되게 국익과 민족공조 및 자주 우선이라는 선명한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김대중 정부의 정책과 그 한계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그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모호한 대북정책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2차 남북정상회담과 군축추진 -> 북미간 핵, 대량살상무기 해결과 북미, 북.일수교 ->평화협정 체결로 설명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4단계 통일 방안"이 그것이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는 미군철수와 군비감축이라는 적극적인 군축 입장을 보이면서도, 기존의 안보틀을 대체할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에 대한 다소 낙관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남측이 먼저 군축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Ⅱ. 16대 대선후보 평화(통일/외교/안보) 정책 권고안

이회창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은 북에 대해서는 일방주의적 입장을, 미국에 대해서는 추종의 입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무엇보다도 북을 통일이 파트너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 그리고 우리 국민과 민족의 주권에 대한 줏대있는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관리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서의 북이 아니라 협력하고 화해하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 모두가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한 정직한 인정, '군사안보'가 아닌 진정한 '평화'로의 의식전환이 될 때 비로소 남북관계는 발전하고 진전될 것이며, 이회창 후보가 밝힌 '상호 공존·협력에 의한 공고한 평화정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3년 한반도 전쟁위기, 특히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대북공격이 우려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미공조'라는 입장아래 이에 대해 침묵하거나,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한 입장이 빈약한 것은 민족과 국민의 인권과 주권에 대한 안이하거나, 무책임한 입장이다. 최근 여중생 문제와 관련하여 소파 개정의 의지를 일정하게 표명한 것처럼, 남북 온 겨레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 한미관계 전반의 불평등성에 대해서도 줏대있는 정책, 자주적인 입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노무현 후보는 무엇보다도 평화문제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에서는 뚜렷한 정책적 입장을 밝히는 것에 반해, 평화문제, 특히 대미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서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그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조성되었던 남북간의 화해협력분위기가 올해 들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한반도 평화는 주변 이해당사국, 특히 미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민족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본원칙임을 주권국가로서 분명하게 미국에게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고

조와 군비경쟁을 촉발할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거나, 대이라크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우호관계를 해쳐서는 안된다며 주한미군범죄로부터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고쳐나가지 못한 김대중 정부의 '부채'까지 물려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비축소를 통해 사회복지와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권영길 후보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정책은 다른 후보들에 비하여 일관성있고 선명하여 매우 진보적이고 전향적이라 평가된다. 또한 실현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정책이 아니라 시대적 필요성과 객관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진보적인 정책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위비의 삭감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의 경우, 이후 국가안보의 유지·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남쪽의 선도적 군축으로 북쪽의 군축을 이끌어 낸 뒤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는데, 남쪽에서 선도적으로 군축을 한다고 해서 북쪽에서 군축에 바로 응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선도적 군축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제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평화단체들과 대선유권자 연대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책 요구안은 별도로 발표)

Ⅲ. '평화와 주권이 보장되는 한반도'를 위한 10대 정책 과제 요구안

1.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와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기반 마련

남북관계를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분단에서 통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대결형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 삭제, 헌법의 영토 조항 개헌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30년간 남북간에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 남북간의 대결을 종식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왔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사업,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옴으로써 상호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에 기여해왔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반세기동안 지속되어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핵 문제를 슬기롭게 푸는 것은 2003년 전쟁 위기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차기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지속과 확대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환경 마련, 북미 상호간의 요구를 동시에 풀 수 있는 협상안의 마련,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 반대, 동결 핵시설의 재가동 및 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 등 북의 극단적 행동 자제 요구 등을 통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또 다시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은 어떠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도 구애받음 없이 꾸준히 지속·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 각계의 자발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전면적 보장

대선 후보들은 교육, 문화, 체육, 여성, 환경, 종교, 노동, 농민, 청년학생, 통일

등 각계의 교류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민간단체의 통일활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집권시 이를 실천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의 통일논의는 당국이 독점해오다시피 해 왔으며, 민간단체의 통일활동은 엄격히 통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각계 사회단체들의 자유로운 통일활동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명백한 법적 규정 없이 남북 공동행사들에 대한 제한과 통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여러 교류협력사업들에 대해 정부당국은 통제와 규제를 앞세우기보다 지원과 보장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각계의 통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남북화해기본법 제정 등 냉전시대의 법령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산가족, 장기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납북자 문제 등의 조속한 해결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적대 관계의 지속으로 인한 남북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산가족 상봉, 장기수 송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납북자 문제 등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제도화하고 해결한다. 이를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장기수 송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의 협의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불평등한 SOFA 전면 개정

이번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한미간의 행정협정(SOFA)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이 많이 있다. 대선 후보들은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개인의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하에 수사권, 형사재판관할권, 환경 조항 등 불평등한 조항을 전면 개정하라는 국민적인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6. 전시 작전권의 환수

종속적인 한미군사동맹관계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동등하고 수평적인 한미관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는 미군에게 위임된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군사 문제에 있어서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의 환수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한 군사행동을 막을 수 있는 한미간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출범 즉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7.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불참

한미간의 비정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국의 MD 참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정부가 MD 구축을 서두르고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의 무력화를,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MD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MD 참여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국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대선 공약으로 MD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하고 차기 정부는 관련된 무기 체계의 도입 중단 및 도입 계획 취소, 미국의 한반도 MD 무기체계 배치 반대, 한미연합 차원에서 구성돼 운영 중인 'CJTMOC'의 해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8. 이라크 전쟁 반대를 비롯한 미국의 참전 요구 거부

미국 주도의 대이라크 전쟁 계획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는 석유 이권 확보와 미국의 패권주의를 중동 지역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더구나 이라크 정부가 유엔의 전면 사찰을 수용하고 사찰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 사용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할 우리의 입장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 한국이 지지

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라크 문제 역시 유엔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참전 요구를 거부할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9. 군복무기간 단축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 복무제 도입

현행 병역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26개월에 달하는 과도한 군복무기간은 개인에게 심각한 기회비용의 박탈로,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현대식 군사력 조직을 만드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 받아오고 있다. 또한 매년 수백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인권 유린과 사회적인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군복무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과도한 군복무기간에 따른 개인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징병제에 의존한 병력 수급 구조를 모병제로 점차 전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남북한의 상호 군축과 21세기 새로운 군사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낭비 방지 차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이 다른 방식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실시해야 할 것이다.

10. 북방한계선(NLL) 지역의 남북공동어로화와 새로운 해상 분계선의 설정

북방한계선(NLL)은 유엔사령부가 북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이후부터 국제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을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교전사태 등 끊임없는 분쟁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남북의 합의아래 새롭게 해상 분계선을 설정하여 군사적 충돌의 요소를 없애야 한다. 또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과도기적 장치로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남북 어민들의 손실과 분쟁 위험을 줄이고 새로운 협력의 모범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전사태이후 선제공격을 채택한 남측의 교전규칙도 무력 충돌 방

지 및 확전 예방이라는 교전규칙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자료 1> 대선 후보 평화(통일/외교/안보) 정책 비교표

* 아래의 표는 평화단체 연석회의와 대선유권자연대가 공동으로 발송한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답변을 하지 않은 이회창 후보의 경우에는 참여연대-경향신문 답변 내용과 공약집, 언론 인터뷰 등을 참고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목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평화단체 입장
1, 남북관계/통일정책				
6.15 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이행여부	제2항 재검토	존중	존중	존중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입장	실패한 정책, 전면 수정	계승 발전	계승 발전하되 '통일정책' 강화	계승발전/탈냉전적인 남북 공동 안보 전략 마련 필요
인도주의적 지원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여부	찬성/ 정부지원은 상호주의와 투명성 보장 조건	반대	반대	반대/ 무조건적인 지원
대북 전력지원 입장	북한 핵포기 및 위협 감소 후 추진	남북 사이에 종합협력 계획을 먼저 마련해 추진	적극 추진	적극 추진
여야 및 시민사회 참여하는 대북통일정책 심의, 결정기구 설치	검토 용의	협의는 가능, 결정권 부여는 반대	찬성	찬성/ 여성참여 50% 보장
북핵문제와 교류협력 연계 문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되 현금지원 및 남북협력 사업은 중단·유보	교류협력 계속 추진	교류협력 계속 추진	교류협력 강화

2. 대미관계

미국 주도의 MD참여	답변 회피	답변 회피	반대	반대
미국의 대이라크 참전 요구 문제	답변 회피	답변 회피	반대	반대
SOFA 개정에 대한 입장	형사관할권 조항 . 환경관련 조항 개선 필요	중요 부분 개정	전면적 개정 (수사권제한 조항 폐지, 공무상 범죄관련 재판권 이양 등)	전면 개정
국제형사재판소(ICC) 면책을 위한 미국의 쌍무협정 요구에 대한 입장	ICC 회원국으로 의무 이행, 따라서 미국 요구에 불응	검토후 결정	불응	불응

대북 중유 제공 중단	KEDO 결정에 따름	답변 회피	반대	반대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문제	답변 회피	소극적 반대	적극 반대	적극 반대
전시작전권 환수	답변 안함	추진	적극 추진	적극 추진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군사행동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답변 안함	현재로도 가능	적극 추진	적극 추진
제네바 합의에 대한 미국의 불이행 문제	답변 안함	불이행한 측면이 인정됨	불이행한 측면이 있음	불이행한 측면이 있음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및 고립화 정책에 대한 입장	암묵적 동의	소극적 반대	적극적 반대	적극적 반대

3.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축방안 안보/외교정책

국방백서 '주적' 표현 삭제	반대	반대	찬성	찬성
NLL의 공동어로화 추진	반대	찬성	찬성	찬성
NLL을 대체할 새로운 해상분계선 설정	반대	반대	찬성	찬성
교전규칙에 선제공격 허용	찬성	찬성	반대	반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유보	찬성	찬성
징병제의 모병제로의 전환	시기상조	시기상조	장기적으로 추진	단계적인 추진
예비군 및 민방위제도 개혁	현행틀에서 보완	예비군, 민방위 모두 기간 단축	예비군제 폐지 및 민방위제 유지	개혁 찬성/ 점진적
제주 화순항에 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 지역주민 동의시 추진	검토후 결정	반대	반대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유지	폐지후 대체입법	폐지	폐지
방위비 증액 여부	증액	현행(GDP 대비 3.2%) 유지	단계적 삭감	단계적 삭감
주한미군 철수 문제	통일이후에도 주둔	통일이후에도 주둔	단계적인 철수	단계적인 감축/철수

<참조자료 2> <참조자료> 각 당 후보별 평가자료 세부내용

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 이번 평화통일사회단체의 공개질의에 대해 한나라당은 애초 '언론사 이외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는 방침이다'라며 답변을 거부하였고, 이후 '질의에 편파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차 답변을 거부하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의 정책평가안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각종 강연, 합동토론회, 토론회 등에서 밝힌 입장에 근거하였음을 밝힌다.

1. 총평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안보우선 정책, 안보지상주의'라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는 자신의 대북정책의 총론적 방향을 '억제력에 기반한 불안한 평화를 넘어 상호 공존·협력의 공고한 평화정착'(8월 21일 희망포럼 연설)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확고한 억제력, 군사적 우위, 북 '주적' 유지 등 구시대적인 남북대결시대의 안보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남북이 일방적인 안보에서 공동안보로 이행해야 한다는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상호간 협력 등 남북간 쌍방의 노력을 통해 신뢰와 화해를 구축하기 보다는 북이 '안보위험'이라는 대북관에 근거하여 북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및 개혁개방 요구 등 북의 변화만를 촉구하는 일방주의적 입장을 표방하고 있어 경직된 대북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의 핵문제에 대해 미국조차 핵'개발의혹'수준으로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후보가 이를 핵'무기보유'로 단정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냉전적 사고이다.
대북정책와 한미관계 전반에서 주권과 인권, 평화와 화해라는 적극적인 입장보다는 철저히 한미공조에 입각한 정책을 제출하고 있어 대미추종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2003년 한반도 전쟁위기, 특히 미국에 의한 대북공격이 공론화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미공조'라는 입장아래 이를 동조하거나,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한 입장이 빈약한 것은 민족과 국민의 인권과 주권에 대한 안이하거나, 무책임한 태도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평화통일정책제안 10여개의 요구안 중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은 3개(이산가족 상봉등 인도적 문제 해결, 군복무기간 단축, 소파개정) 이다.)

2. 평가

대북정책

이회창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남측 내 합의 없는 일방적

인 '대북퍼주기'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남남갈등을 유발한 문제, 북에게 끌려다니는 무분별한 대북지원으로 북의 전술에 활용된 문제, 이러한 대북지원이 금강산댐, 핵시설로 전용되는 의혹이 있으며, 결국 교류협력이 북의 무장화를 도와주었다며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의 이러한 평가는 근본적으로 북이 여전한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며, 변화하지 않았다는 대북관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북의 변화나 개혁개방은 전술적 차원일 뿐 근본적 변화는 아니라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이후 북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며 북에 대한 '주적'표현은 절대 삭제되거나 철회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2001년 11월 8일, 2002년 11월 5일 재향군인회 특강)

이회창 후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꼽고 있으며, 북의 개혁개방에 의한 안보위험 해소의 성과와 연계하여 대북지원, 경제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군사적 억지력에 기반하여 긴장완화를 유도하고, 경제적 지원이 안보위험 해소로 귀결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긴장완화의 방법에서 무게중심이 군사적 억지력과 검증이라는 부분으로 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는 북을 통일시대의 동반자라기 보다는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확고한 흡수통일론의 시각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때문에 그의 정책은 남북간 관계개선과 신뢰회복을 추구하는 '통일지향 정책'이기 보다는 안보위협인 북을 '관리'하고 변화시키는 차원의 '대북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

대미정책

이회창 후보의 대미정책은 한미공조의 강화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2002년 초 부시대통령이 북을 '악의 축'으로 발표하기 직전 방미해서 미국관리들과 만난 후 '부시행정부와 대북정책에서 충분한 공감을 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소위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입장에 전적인 동의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7월 25일 한국발전전략연구소 초청토론)거나, "북핵문제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10

월 23일 대통령-후보 회동)는 등의 발언에서 확인되듯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최근 소위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이회창 후보는 미국의 주장과 같이 북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핵개발을 한 문제이다(mbc 100분토론 11월 7일)라는 전제아래, 그동안의 지원이 핵개발로 전용되었을 수 있다고 제기하면서 북의 핵의혹에 대한 완전한 해소가 될 때까지 일체의 현금지원 및 금강산 관광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 소위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대북지원과 남북간 협력사업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일정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하자 철저한 한미공조아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의 핵보유여부는 아직까지 미국조차 핵'개발의혹'수준으로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후보가 이를 핵'무기보유'로 단정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냉전적 사고이다.

또한 이회창 후보가 자신이 평화정책에서 남북이 논의의 당사자로 되어야 한다는 당사자주도의 원칙을 주요하게 제출하였다는 것을 상기해볼 때, 한미공조 강화와는 모순된다. 이는 결국 한미간 조율된 내용을 남북대화에 그대로 반영한다, 또는 관철한다는 대미추종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이번 '북핵문제'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다른 후보와는 달리 제네바합의에 대한 미국측 불이행과 관련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축

이회창 후보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대북정책의 기본 목표로 둘 만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으며, 특히 북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문제를 핵심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한국발전연구원 초청강연)

이회창 후보는 평화원칙에서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병행을 밝히고 있지만 평화정책 과제에서는 선 긴장완화 후 지원의 입장을 갖고 있다.(8월 21일 희망포럼) 한나라당의 초기 대북정책이 선 긴장완화의 일관된 입장이었음을 고려해 본다면 평화3원칙에 병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은 협력지속에 대한 국민여론을 반영한 긍정적인 지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번 핵문제와 관련하여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중단' 등의 입장에서 확인되듯이 여전히 선 긴장완화의 입장에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특징은 5대과제 중 하나로 다자간 동북아평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만큼 동북아 평화문제에 다자간의 이해와 문제가 얽혀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긴장완화 대책은 북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즉 모든 책임

을 북 일방에게로만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한미공조의 강화가 최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평화문제는 남북간 논의사항이라고 단정짓는 것 또한 마찬가지의 모순이다.
세 번째로, 평화실현을 위해 북의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에 대한 감축을 말하면서도 정작 남측의 국방비는 증액하겠다는 입장사이의 모순이다. 남북간에는 이미 91년 남북합의서 안에서 상호군축을 합의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에게만 군축을 요구하고 남측은 도리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군사적 우위를 통한 평화담보라는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안보/외교정책

이회창 후보는 북과 대치하는 안보현실, 북에 대한 안보관의 혼란 우려 등을 들어 국가보안법 개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기조는 '주적'표현의 고수입장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의 영토조항과 관련해서는 최근 남, 북 정부가 실존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정할 수도 있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MD, 이라크 참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한미공조의 원칙아래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며, 특히 미국의 소위 '반테러 전쟁'에 대해서는 지지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
SOFA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최근 신효순, 심미선 양 압사사건을 계기로 전사회적인 개정요구들이 활발히 제기되자, 개정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정의 기준과 방향,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3. 권고안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무엇보다도 북을 통일이 파트너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 그리고 우리 국민과 민족의 주권에 대한 줏대있는 자세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관리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서의 북이 아니라 협력하고 화해하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 모두가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한 정직한 인정, '군사안보'가 아닌 진정한 '평화'로의 의식전환이 될 때 비로소 남북관계는 발전하고 진전될 것이며, 이회창 후보가 밝힌 '상호 공존·협력

에 의한 공고한 평화정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적표현/국가보안법 등 북을 적대시하는 제도들을 폐지하는 것과 함께, 남북 모두에게 가해지는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압력행사가 아닌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미관계 전반의 불평등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줏대있는 정책, 자주적인 입장으로 하루빨리 전환하여야 한다. 최근 여중생 전차압사사건을 계기로 소파개정의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소파전면개정, 작전지휘권 환수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근본에서 개선할 수 있는 조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동시에 전세계적 범위에서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의 패권적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입장을 가져야 하며, 대북지원 및 협력 중단요구, 이라크 참전요구, 미사일방어체제 동참요구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Ⅱ.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1. 총론

노무현 후보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이어받겠다'는 평소의 공언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즉, 신뢰에 바탕을 둔 대북접근이라는 원칙적 자세를 견지하고, 정치적 신뢰 조성, 화해협력의 틀 마련, 6.15 공동선언 등과 같은 김대중 정부의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되, 충분한 국민적 합의나 북한의 합의 준수를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무현 후보의 대북정책은 남북간의 화해협력이라는 큰 물줄기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는 확고한 의지에 기반한 것으로 대체로 긍정성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통일의 밑거름이라는 총론을 넘어선 구체적인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한편, 대미정책에 있어서는 평소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공약해 왔지만, 답변서에 의하면 지나치게 미국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대미자세는 미사일방어체제 참여 문제와 대이라크 전쟁 참여 문제, 재판권 이양 문제 등에도 그대로 이어져,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하고 국가이익을 면밀히 따져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을 인정하는 등 사실상 보수적인 이회창 후보와 뚜렷한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 평가

대북정책

노무현 후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의 파트너로 공식 인정했다. 노후보는 조건없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북에 전력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건부 지원' 단서를 달고 있다. 북 핵문제가 해결되고 개성공단이 추진될때 전력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과 외교관련 종사자가 "주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한다.

노무현 후보가 생각하는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는 1) '남북 화해협력'을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확장하고, 2) 소극적인 '북한의 도발 불용'(대북 3대원칙 중 1항)을 '적극적인 평화체제 구축'으로 전진시키며, 3) '흡수통일 불추구'(대북 3원칙중 2항)을 '공동번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통일에 대한 개념을 체제나 국가간의 통합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간의 신뢰 확립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제일 먼저 분단체제의 완전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북간 분쟁 및 갈등사안에 대한 평화적 해결 추구,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 기반을 다져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미정책

노무현 후보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이 북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것은 '북의 실체를 온전히 다 반영하지 못한 외교적 수식'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다만,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선제 공격과 한반도 전쟁은 한민족의 공멸이 예상되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

북의 미사일 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 타결"을 통한 해법이 유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제네바합의 파기는 꼭 막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은 제네바 합의가 원상 회복되도록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조치

를 취해야 한다'며 북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지만, 합의의 다른 쪽 당사국인 미국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노무현 후보측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정부가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군사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전쟁 방지를 위한 좀더 확실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및 군축 방안

노무현 후보는 현정권 동안 남북의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긴장완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차기 정부가 남북간의 군사문제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군사 직통 전화개설과 군 인사, 정보교류, 군사적 신뢰구축, 남북간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충실한 이행이라고 보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북의 전방배치 군사력 후방이동 및 감축에 대해서는 노무현 후보가 아직 공식 견해를 밝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의 요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북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향후 남북간의 군사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북방한계선(NLL)을 대체할 새로운 해상분계선 설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반면, 남북한의 해상 무력충돌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남북 한계선 지역을 남북 공동어로로 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 후보 측은 동북아 평화와 균형적 안정추로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정하고 사실상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인정하고 있다.
평화체결 협정 방식에 대해선 북과 미국간의 평화협정을 우선시 하기보다는 남과 북이 먼저 체결을 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간의 국제적 보장을 확보하는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보/외교정책

노무현 후보측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 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조항들은 기존 형법 체계 속에 흡수하거나 대체입법 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위비의 수준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군 복무 기간 단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군 전력수준의 저하 등을 이유로 군 복무 기간 단축문제는 '고려'의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건 다른 후보들과 대비되는 입장이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을 수 없지만,
양심의 자유도 소중한 만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검토' 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이 미국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MD의 내용과 의미, 한반도에서의 적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그리고 이라크 참전에 대해서도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하여, 국가이익차원에서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시 군작전 지휘권 환수는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미행정협정은 미국측에 추가협상을 제의하되, 전면 개정보다는 '주요한' 부분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과 방향에 있어서는 주된 비교기준으로 미-일, 미-독 소파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과 호혜평등의 기준에 입각,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불평등이 강조되는 조항들을 개정하겠다는 보다 주체적인 시각이 분명하지 않다.

3. 정책권고안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노무현 후보는 그와 더불어 민족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본원칙임을 주권국가로서 분명하게 미국에게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고조와 군비경쟁을 촉발할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거나, 대이라크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의 패권주의와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 외교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이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우호관계를 해쳐서는 안된다며 주한미군범죄로부터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고쳐나가지 못한 김대중 정부의 '부채'까지 물려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비축소를 통해 사회복지와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Ⅲ.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1. 총평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화해교류협력 추진의 성과는 인정하고, 6.15공동선언과 기존의 남북합의 사항들(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은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김대중 정부의 교류 중심인 "대북정책"은 남북미간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 체재하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의 정책은 일관되게 국익과 민족공조 및 자주 우선이라는 선명한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김대중 정부의 정책과 그 한계성을 지적, 비판하고 그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모호한 대북정책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차별화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2차 남북정상회담과 군축추진 -> 북미간 핵, 대량살상무기 해결과 북미, 북.일수교 ->평화협정 체결로 설명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4단계 통일 방안"이 그것이다.

2. 평가

대북정책
권영길 후보는 "대북정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극적이고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대북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화해,협력>→<민족연합-민족통일기구수립>→<연방국가>→<완전한 사회통합>이라는 4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6.15공동선언의 지속적인 이행과 그 기본 정신인 민족 공조의 입장을 대북.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전과정에서 일관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권영길후보는 북을 통일의 대상 즉 통일을 위한 파트너로서 규정함으로써, 북을 관리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대북관 보다는 매우 전향적이고 진일보한 대북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적개념을 조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두후보와는 뚜렷이 차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북지원과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먼저 인도주의적 지원은 조건없이 이루어져

야 하며 경제교류도 민족경제 회복이라는 큰 틀(즉, 분단이전 남북경제의 유기적 상호의존성 회복과 현 남한 경제체제의 장점과 북한경제 잠재력과의 결합을 말함)과 비전을 갖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남쪽에서의 상호주의나 대북 퍼주기 논란 등과 같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국민적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뿐만아니라 북측으로부터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경계심과 거부감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대미정책

권영길 후보의 대미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북공조와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성에 입각하고 있다.
권영길후보는 "악의 축" 발언으로 상징되는 미국부시정부의 대북관과 강경일변도의 대북압박정책을 자국의 경제적 이익추구와 일방적인 세계패권 지배전략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북미간 제네바 합의와 관련한 미국의 위반책임과 북에 대한 부당한 위협과 압박을 지적하고, 이 문제 체결을 위해서 미국의 "대북 핵위협 및 핵우산 정책" 폐기와 함께 북에도 미국의 핵문제 관련 우려 해소를 권고 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에 어떠한 핵무기의 생산, 반입, 배치, 사용도 금지하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협정과 더불어 "남북미 3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체제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1991.12.31에 있었던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이 남북의 의무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의 비핵지대화 사례처럼, 주변국들의 핵위협금지 보장과 자국의 핵무기 생산은 물론, 외국으로부터 핵무기 반입·배치까지도 금지하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기존의 한반도를 둘러싼 핵 관련 협약의 불평등성과 미비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주권국가로서의 입장을 세우면서 설득력 있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궁극적으로 남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의 전시작전권 환수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 조약과 SOFA등 부속합의서를 개정 또는 폐기하고,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런 조건없이 미국에 헌납한 군사주권을 되찾고 자주적인 국방.외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축방안

권영길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과 관련하여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권영길후보는 남측의 선도적 군축을 통한 남북간 상호군축을 실현하고 이 과정에서의 "남북미간 평화 협정"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위한 협상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로 생기는 동북아질서의 균형상실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남과 북이 참여하는 '다자간안보협의체'를 통해 극복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 미국 주도의 정전체제하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도 전에 남쪽이 선도적으로 군축을 시작한다는 입장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20만 군병력축소가 실제 전력에 영향이 없는 후방부대 병력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사력의 손실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남과 북간의 군사적 대결구도를 혁파하는데 있어 남쪽의 선도적인 군축만이 남과 북의 상호불신 해소와 신뢰관계 형성에 기여하면서 북쪽을 상호군축의 흐름에 동참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외교정책

권영길 후보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관하여, 유지 혹은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타후보들과는 달리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그 정신에 위배되며, 실정법상으로도 남북교류협력법과 상치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방위비 및 군 병력 규모와 군 복무기간 문제에 대하여도 대폭적인 감축 입장을, 미국의 MD계획과 이라크 전쟁 참여에 대하여도 국익 차원에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 대하여도 대체복무제나 지원병 제도 도입 등 현실성 있는 대안과 연계하여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3. 정책 권고안

권영길 후보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정책은 다른 후보들에 비하여 일관성있고 선명하여 매우 진보적이고 전향적이라 평가된다.
또한 실현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정책이 아니라 시대적 필요성과 객관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진보적인 정책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부분이 아쉽다.
예를들어 방위비의 삭감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의 경우, 이후 국가안보의 유지·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남쪽의 선도적 군축으로 북쪽의 군축을 이끌어 낸 뒤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는데, 남쪽에서 선도적으로 군축을 한다고 해서 북쪽에서 군축에 바로 응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선도적 군축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제시가 요구된다.
즉 남과 북의 군사적 신뢰상태가 전무한 상황에서 남북 상호군축의 실현 가능한 Process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먼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군사적 대립체제를 법적으로 종결짓고, 그에 근거하여 상호군축을 추진해 나가자는 제안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일 수 있다.